

---

#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 수출 · 투자로 민생 경제 활력 회복 -

---

2024. 1. 31.



산업통상자원부

## 순 서

I . 2023년 추진성과와 평가 .....	1
II . 2024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	2
III . 2024년 부처 핵심 추진과제 .....	4
1. 역대 최고 수출 달성: 수출이 민생이다 .....	4
2. 첨단산업 초격차 역량 확보: 미래 대한민국 먹거리 .....	7
3. 공급망과 경제안보 확립: 국민과 기업의 보루 .....	11
4. 무탄소 에너지 대전환: 깨끗하고 따뜻한 에너지 .....	15
5. 지역경제 및 투자 활성화: 구석구석 온기 도는 지방시대 .....	19
6. 국민 체감형 업무 혁신: 국민의 불편을 바로 해소 .....	21

## I. 2023년 추진성과와 평가

### □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필두로 수출 흑자 전환 및 최대 외투 실적 달성

- 20개월만에 수출 플러스 및 월별 무역수지 흑자 전환 동시 달성, 고부가 차량 수출을 바탕으로 자동차 수출 최고치 기록
- 사상 최대 외국인 투자 유치 실적 경신(327억불)
- 정상 외교로 미·영 등과 전략적 첨단산업·공급망 협력관계 구축, 중동 Big 3 국가와는 853억불 경제성과 창출

### □ 전략적 산업·통상정책으로 공급망, 첨단산업 등 경제안보 강화

-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7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안 확정
- 美 IRA, 반도체법, 中 반도체 장비 반입 승인(VEU) 등 우리 기업의 불확실성 해소를 통해 美 전기차 수출 확대 등 새로운 기회 창출
- 4년 만에 韓-日 화이트리스트를 복원하고, 요소·흑연 등 중국發 공급망 불안에 신속 대응
- 중동 6개국과 한-GCC FTA 협상 최종 타결('23.12)

### □ 원전 활용확대 등 안정적 원전 생태계 복원과 에너지 복지 확대

- 신한울 3·4호기 건설(총사업비 11.7조원) 재개 등 원전 정책 정상화
- 취약계층 대상 최대 59.2만원 난방비 지원(중전 가스 14.4만원, 열 4만원)
- 세계 최초 수소발전입찰시장 개설

△ 글로벌 복합위기 심화로 우리 기업 환경은 여전히 도전적

△ 에너지 공기업 경영 정상화와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등은 추가 과제

## Ⅱ. 2024년 업무 추진 여건 및 방향

### 1 업무 추진 여건

#### □ 여전히 녹록지 않은 실물경제 여건

- (단기) 미국<sup>發</sup> 고금리 지속, 고물가, 가계·기업 부채 증가 등으로 소비와 기업 투자 동시 위축 우려
  - 단, 수출은 올해 반도체 세계 수요 증가·단가 상승, 자동차·선박 등의 증가세 유지 등 여건 개선으로 수출 상승세를 이어갈 전망
- (장기) 생산 가능인구 감소, 노동 생산성 하락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정체\*되며 저성장이 지속될 우려

\* 저출산·고령화로 잠재성장률은 2013년 이후 계속 하락, '23년 1.9%, '24년 1.7%(OECD)

#### □ 공급망, 경제안보를 중심으로 글로벌 불확실성 심화

- 미·중 경쟁으로 경제 블록화 가속, EU CBAM 등 무역장벽 확대로 자국 우선주의 下 공급망 재편 지속
- 러·우 전쟁, 중동 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되고, 美 대선 포함 전세계 70여개국 선거 등 정치적 불확실성 증폭

\* 인도('24.5), 유럽의회('24.6), 미국('24.11) 등 24년은 유사 이래 가장 많은 선거가 있는 해

#### □ 안정적 에너지 공급과 탄소중립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요구 확대

- 글로벌 안보위기로 높은 에너지 가격이 지속될 전망으로, 탈화석연료 및 청정에너지 보급 가속화에 대한 요구 증가
- 글로벌 차세대 원전 개발 및 수소 공급망 선점 경쟁 심화

⇒ 윤석열 정부 중간 반환점(3년차)를 맞아 민생 안정,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실질적 성과 창출을 본격화 필요

## 2 업무 추진 방향

2024 비전

### 수출 · 투자로 민생 경제 활력 회복

#### 목표

- ◇ 수출 7,000억불, 외국인투자 350억불
- ◇ 첨단산업 중심으로 민간 투자 150조원

역대 최고 수출 달성	수출 우상향 추세 가속화	수출 전략 품목·시장 육성, FTA 확충
	수출 기업에 대한 역대급 지원	수출 3대 애로 해소, 성장사다리 구축
	정상 경제외교의 효과 극대화	MOU 등 조기성과 창출, 기획·홍보 강화
첨단산업 초격차 역량 확보	첨단산업 글로벌 투자 허브	입지·인력·세제 지원, 외투·유턴 확대
	국가첨단전략산업(4+α) 생태계 조성	반도체·이차전지 등 혁신 생태계 조성
	AI를 활용한 제조공정 혁신	「AI 자율 제조 마스터플랜」 수립
	차세대 기술 집중투자 및 혁신성과 창출	도전적·혁신적 R&D 지원, 인력 양성
공급망과 경제안보 확립	‘산업 공급망 3050’ 본격 추진	기술개발, 다변화, 비축 확대
	에너지·자원 국내 수급 관리 철저	석유·가스 수급 관리, 자원개발 투자 촉진
	경제안보 최전선을 수호하는 통상전략 전개	자국우선주의 대응, 통상 네트워크 확대
	국가 핵심기술 보호 강화	무역 기술 안보 강화, 통상 조직 강화
무탄소 에너지 대전환	무탄소 에너지 이니셔티브 글로벌 확산	CFE 이행기준 마련, CF 연합 확산
	무탄소 에너지 원별 공급 역량 강화	원전·재생·수소 공급역량 확대
	전력시장 개편 및 전력망 확충	11차 전기본 수립, 원별 시장제도 신설
	에너지 효율 혁신 및 에너지 복지 강화	제도·전달체계 개편, 사각지대 최소화
지역 경제 및 투자 활성화	지방투자 촉진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획발전특구 지정, 지역 미래전략산업 육성
	지역 산업단지 혁신 가속화	킬러규제 개선, 문화·편의·주거시설 확대
국민 체감형 업무 혁신	관행적 불공정·불합리 해소	재생e 특혜 제거, 안전인증기관 확대
	부처간 협업과제 확대	범정부 수출 지원, 방산, 전문인력 양성
	「현장 산업부」	산업투자전략회의, 통상법무 카라반 신설

### Ⅲ. 핵심 추진과제

## 1 역대 최고 수출 달성 : 수출이 민생이다

### ① 수출 우상향 추세 가속화

#### ◇ 수출 7,000억불 달성을 위한 숨은 1인치 발굴·맞춤형 지원

#### □ 타겟 시장별 新성장동력 수출 지원

- 글로벌 4대 핵심 트렌드(공급망, 디지털, 탄소중립, 인구구조)에 맞춰 30대 전략 품목, 10대 전략 시장 선정

\* 매년 4대 부문 기준으로 시장 수요, 트렌드를 반영하여 품목 추가·변경

#### 【 전략품목 및 전략시장(예시) 】

트렌드	전략 품목	타겟 시장
공급망	<b>반도체</b> 고성능메모리(HBM 등), AI용 시스템반도체 등 <b>자동차</b> 전기차, <b>배터리</b> 양극재	북미, 유럽, 아세안
디지털	<b>통신</b> 카메라모듈, <b>디스플레이</b> 차량용/투명 OLED	일본, 아세안
탄소중립	<b>철강</b> 친환경에너지용 강재, <b>조선</b> 친환경선박, <b>에너지</b> 원전, 태양광 모듈, 인버터, 풍력타워, 수소연료전지	유럽, 중동
인구구조	<b>바이오</b> 바이오시밀러, 임플란트, 초음파영상진단기,	중국, 아세안, 인도, 아프리카

- (북미)전기차·반도체 중심 GP\* 활용, (유럽)배터리 공급망 대응 GP 신설, (중국)프리미엄 소비재·친환경 시장 진출, (아세안)전후방 산업 연계 강화

\* GP(Global Partnering) 센터 : 기업별 맞춤형 수주 지원을 통해 현지시장 진출 지원

#### □ 전세계 GDP 85 → 90%로 우리나라 '경제영토'(現 2위) 지속 확대

- 말레이시아 등과 신규 FTA 체결 및 영국 등과 FTA 고도화\* 추진

\* 영국, 칠레(규범·경제협력 강화), 인도(자유화 확대)

- 인태시장 확보를 위해 IPEF 활용 및 CPTPP 가입여건 조성

\* IPEF 공급망 협정을 통한 14개국 간 핵심품목 협력체계 및 위기대응네트워크 구축 등

- 베트남 등과 탄소 국제감축 협력 가속화를 위한 시범사업 확대\*

\* 투자 지원 확대('23, 60 → '24, 330억원) 및 타당성 조사 신규 지원('24, 20억원) 등

- 공급망·그린·기술 시장 확대 기회로 ODA 활용('23, 645→'24, 907억원)

## 2 수출 기업에 대한 역대급 지원

### ◇ 금융·마케팅·인증 등 3대 애로 해소 및 수출 성장 사다리 구축

#### □ 수출 기업 3대 애로 지원 강화

##### ① 금융 : 역대 최대 규모의 무역금융 지원

- 무역보험 공급 확대('24, 250조원), 시중은행·무보 자금을 활용한 2.2조원 규모 패키지 우대상품\* 신설('24.1분기)

\* (5대 시중은행) 기금출연, 저금리 상품 제공 + (무보) 보증·보험료 할인, 한도 상향

- 방산·원전·플랜트 등 대규모 프로젝트 금융 지원 강화

\* 중장기 프로젝트 수출보험 체결한도 상향('24, 20조원), 프로젝트 협력사 보증 지원 강화(방산 → 원전, 이차전지 등 추가)

- 수출 중소·중견에 필요한 단기보험·신용보증료 50% 일괄 할인, 환변동보험 한도 50% 확대\*

\* (현재) 수출실적의 100%(정상등급)/60%(제한등급) → (확대) 150%/100%

##### ② 마케팅 : 수출 원팀으로 현지 마케팅 강화

- 수출 바우처 약 2배 확대('24, 311억원), 인도·ASEAN·중동 등 수출 유망국 10개국 무역사절단\* 파견

\* 인도, ASEAN, 중동 등 시장 특성 및 주요 품목 경쟁력을 고려하여 10개국 선정

- CES 등 유명 전시회에 통합한국관 확대(150회), 유망시장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3,200개사), 한류 박람회 확대 개최(3회)

##### ③ 인증 : 신속한 해외인증 취득 지원

- 친환경·고기술\* 신분야, 중남미 등 신시장의 상호인정 품목 확대

\* 전기차 충전기·생분해 플라스틱 등 추가 / 방폭 시험장비 구축 ('24년)

- 해외인증 패스트트랙 및 국내 시험비용 인하\*(최대 20%) 연장

\* 신수출동력 분야 등 수출 시급 기업 우선 지원 : (現) '24.3월 → (改) '24.6월

## □ 수출기업 유형별 성장 지원

- ❶ 청년 및 1인 기업 : 디지털·청년 무역인력 1,800명 이상 육성, 수출기업·상품 정보 디지털 콘텐츠 2배 확대('24년 4만건)
- ❷ 테크기업 : 글로벌 스타트업과 협력·매칭을 위한 거점센터 신설\*, 16개 스타트업 거점 무역관 운영
  - \* Global K-Tech Camp: 실리콘밸리('23.12) 외 파리, 싱가포르, 도쿄 등으로 확대하여 창업공간 제공, 마케팅, 투자유치·진출, 인재유치 등 종합 지원 제공
- ❸ 내수·초보기업 : 전문무역상사 중심으로 초보 맞춤형 컨설팅 지원\*, 전시·상담회·온라인을 종합 활용\*\*한 해외마케팅 강화
  - \* 내수, 수출중단, 수출초보 등 수출 이력을 고려하여 컨설팅 차별화 ('24년 5,500개사)
  - \*\* (전시·상담 전용관)수출 첫 걸음관(800개사), (온라인)B2B 플랫폼 입점·마케팅 지원(500개사)
- ❹ 중견기업 : 「中堅 수출기업 전환 지원단\*」을 통한 내수 중견의 수출 기업화\*\* 촉진
  - \* 산업부·유관기관(17개) 합동, 컨설팅·금융·인증·물류 등 수출 쏠주기 밀착 지원 ('24.2월 발족)
  - \*\* 매년 수출 중견 40개 발굴(~'28, 200개) 및 중견 수출비중 20%('24) 달성('23.1~'3Q 18.8%) 목표

## ③ 정상 경제외교의 효과 극대화

### ◇ 사전 기획에서 체계적 관리까지 조기성과 창출형으로 업그레이드

## □ 국가별 정상 경제외교 실질적 성과이행 촉진

- 국가별 이행점검 플랫폼을 지정\*하여 민간 MOU(385건), 투자유치 (65.8억불) 성과 이행 점검
  - \* 예 : (미) 정상 성과이행 민관TF, (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 (베트남) 베트남-코리아 플러스

## □ 전략적 세일즈 외교 기획 및 성과 확산

- 산업부·대한상의·무협·한경협·코트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세일즈 외교 지원단(단장: 통상차관보)' 신설\*로 기획·홍보 강화
  - \* 경제사절단 기업 구성, 현지 경제행사 개최, MOU·투자 계약, 후속 이행 등 순방 쏠 단계에 걸쳐 메시지 관리, 성과 사업 발굴, 성과 사업(사례) 기획 홍보 등
- 경제외교 포털(코트라)을 전면 개편하여 정상외교 성과 관리 플랫폼化



## 2 첨단산업 초격차 역량 확보 : 미래 대한민국 먹거리

### 1 첨단산업 글로벌 투자 허브

#### ◇ 첨단산업 중심 150조원 규모의 국내 투자 실현

##### □ 범부처 지원으로 첨단산업 중심 민간투자 150조원 달성(외투 포함)

- 인프라 : 첨단 특화단지 신속 조성을 위해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지원(~'24년 1,392억원), R&D 강화 등 특화단지 종합지원방안 마련
- 인력 : 특성화대학원 확대\*, 한미 청년교류 지원으로 국내 청년인재 양성하고 우수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한 전담체계(KOTRA) 마련
  - \* 특성화대학원 : ('23) 반도체 3개 → ('24) 반도체·배터리 3개, 디플·바이오 1개 추가
- 금융지원·세제 : 정책금융 확대\*,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24년말 일몰) 연장하여 기업의 자금확보와 투자 부담 경감
  - \* '23년 13조원 → '24년 14.7조원(대출 11.5조원, 보증 3.2조원)
- 규제 : 첨단산업 규제 지속 혁파를 위해 3대 규제혁신 제도를 마련
  - \* ①킬러규제개선 프로세스 운영, ②첨단산업 규제지수 개발, ③규제영향분석 도입 검토

##### □ 첨단기술 및 공급망 강화를 위한 외국인 투자 및 유턴 확대

- 첨단기술 확보 : 국내 수요에 기반하여 100대 핵심기업 선정
  - 첨단 외투 인센티브 강화(투자액의 최대 50% 지원), 외투기업 전용 R&D 사업 신설(15억원) 및 석·박사 R&D 인력 채용 지원
    - \* 온라인채용플랫폼, 채용설명회 등을 통해 지역소재 외투기업 맞춤형 인재 매칭
  - 첨단기술 유턴 투자에 대한 보조금 한도 확대\*, 인정요건 완화\*\*
    - \* 수도권 150억원, 비수도권 300억원 → 수도권 200억원, 비수도권 400억원
    - \*\*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요건 면제, 투자완료시까지 해외투자제한 요건 폐지 등
- 공급망 강화 : 아태 공급망 거점화 위한 외투·유턴 촉진
  - 글로벌 기업 지역본부\* 적극 유치 및 공급망 연관 기업 간 동반·협력형\*\* 유턴시 입지 요건 완화, 보조금 지원 우대 검토 등
    - \* 지역본부 입지에 대해 서비스형 외투지역 지정을 통해 임대료 지원
    - \*\* (동반) 공급망 내 2개 이상, (협력형) 국내 수요기업과 연계 복귀

## ② 국가첨단전략산업 [4+α] 생태계 조성

### ◇ 첨단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으로 초격차 유지 및 추가 후보 발굴

#### □ 반도체 : 시스템 반도체 등 반도체 생태계 역량 강화

- 기술 경쟁력 확보 위해 금년부터 시스템 반도체 검증센터 본격 구축, 팹리스 쉐 벨류체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24.上)
- 첨단 패키징(예타착수, 5.5천억원), 첨단반도체 미니팹(예타착수, 9천억원) 등 미래시장 선점 위한 대규모 R&D 추진
- 향후 3년간('24~'26) 24조원 규모의 대출·보증 우대 지원을 통해 팹리스·소부장의 스케일업 및 자립화 촉진

#### □ 이차전지 : 핵심 원자재 공급망 자립화와 창의·혁신 생태계 지원 강화

-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해 민간 광물확보 프로젝트 지속 발굴, 국내 광물 가공시설 확충을 위한 전방위 지원 및 5.9조원 정책금융 공급
- 안전<sup>高</sup>전고체, 무게<sup>低</sup>리튬황 등 차세대 전지 본격 개발('24~'28, 1,172억원)

#### □ 디스플레이 : OLED 확산 및 차세대 기술 투자 개시로 초격차 공고화

- 기술 고도화 및 실증 지원(여의도역 투명 OLED, '24.上) 등으로 OLED 확산
- 차세대 무기발광 대규모 R&D로 시장 선점('24~'26, 352억 + 예타 9,500억)

#### □ 바이오 : 민관투자 활성화를 통한 바이오산업의 미래 성장동력화

- 바이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24.上)을 통해 전략 거점 육성
-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공정 고도화 지원 확대(예타추진, 약 5,000억원) 및 바이오 소부장 사업화 지원 등 바이오 제조 경쟁력 강화

#### □ 미래차, 차세대 방산, 첨단 로봇 등 새로운 첨단동력 지속 확보

- 연내 기술, 산업 지정절차를 거쳐 국가첨단전략산업 추가 지정 검토

### 3 AI를 활용한 제조업 생산성 제고와 제조공정 혁신

#### ◇ 「AI 자율 제조\*」 실현을 위해 제조공정 및 생산시스템 혁신 추진

\* 공정혁신(장비 혁신 + 제조 AI 융합) + 생산시스템 혁신 → 제조업 자율화

#### □ 주력 제조업 중심으로 「AI 자율 제조 마스터플랜」 수립('24.上)

- 「자율 제조 변혁지도」를 통해 제조업 자율화 방향성을 제시하고 AI, SW, 기계·장비 간 융합 등을 위한 쏘 제조공정 분석 추진
- 「AI 자율 제조 기술로드맵」을 수립하여 AI, SW, 기계·장비 등 3대 분야 고도화를 위한 핵심기술\* 식별 및 기술개발 추진\*\*

\* ▲AI 인지·제어, ▲SW 기술, ▲AI 자율 제조 데이터 표준, ▲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 AI 자율 제조 핵심기술 R&D 예비타당성조사 추진('24.下)

#### □ 부처 간 협업을 토대로 「AI 자율 제조」 시범 프로젝트 추진

- 지역별 1~2개 업종 대상 시범 프로젝트\*를 추진('24.上)하고 국내 제조업 특성에 맞는 기계·장비 도입, AI·SW 솔루션 개발 등 추진

\* 예) 반도체 용인, 천안, 대전, 자동차 천안, 홍성, 광주, 대구, 방산 창원 등(국가 첨단산업 지정, '23.3월)

- 산업부\*뿐 아니라 과기부(AI, SW 기술 확보), 중기부(스마트공장 등) 등 유관 부처와 협업하여 「AI 자율 제조」 실현을 위한 혁신 가속화

\* (로봇) 보급(708억 원), 기술개발(1,230억 원), (기계·장비) 보급(82억 원), 기술개발(1,614억 원) 등

#### □ 「AI 자율 제조」 도입 확산을 위해 선제적 제도·인프라 정비

- 「AI 자율 제조」의 도입 및 확산을 위해 기술개발, 인력양성, 금융 지원, 규제혁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24.下)

- 민·관, 범부처 협업을 위해 「AI 자율 제조 추진단\*(가칭)」 구성·가동

\* (주요 기능) ▲기술개발, ▲보조금, ▲인력양성 등 공동 기획 및 사업 연계·협력 추진

#### 4 차세대 기술 집중투자 및 우수 연구인력 양성

##### ◇ R&D 혁신으로 미래 먹거리 창출과 청년 연구자 성장기반 조성

##### □ 세계 최고·최초 성과를 위한 도전적·혁신적 R&D 지원

- 첨단산업·소부장·국제협력 등에 산업R&D('24, 5.1조원) 집중 지원
  - \* '24년 예산(조원) : 첨단산업 1.1(6%↑), 소부장 1.7(3%↑), 국제협력 0.3(21%↑)
- 11대 40개 초격차 프로젝트에 신규 예산 70%를 배정하여 민관합동 2조원 투자, 파급효과가 큰 10대 게임체인저 기술 개발('24 예타신청)
- 세계 최고 연구기관과 협력으로 180개 초격차 급소기술·산업원천기술 확보
  - \* MIT, 스탠포드 등 6개 협력센터 구축 / ('24) 2,062억원 → (~'30) 약 1.9조원 투입 목표
- 기업이 주도하는 성과창출형 시스템으로 전면 개편(R&D 혁신방안, 1.18)
  - \* 정부는 품목만 지정하고 기업이 개발계획 수립, 주관기업의 예산집행 자율성 확대 등

##### □ 민간 부문의 첨단산업 등에 대한 R&D 투자 유인 강화

- CVC 펀드 확충을 통해 대·중견기업의 딥테크 연구자·벤처 투자 촉진
  - \* ('23) 1.4조원 → ('24) 민관 합동 총 2.4조원 조성 목표
- 중소·중견기업 사업화 지원 초저금리 융자형 R&D 신설(5,400억원)
  - \* (융자) : 900억원, 금리(변동) 1.84%, (이자보전) : 4,500억원 규모, 시중금리 5.5%p 보전
- 대기업·공공연의 우수기술 이전 확대\*, 기획형 규제 샌드박스 신설 등 첨단산업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반 강화
  - \* 나눔기관 : ('23) 23→ ('24) 28개社 / 이전 건수 : ('23) 388건 (260개社)→ ('24) 540건 (370개社)

##### □ 첨단산업 인력수혈 확대 및 청년 연구자 지원 강화

- 첨단산업 석박사 전문인력\* 및 맞춤형 현장인력 양성\*\* 확대
  - \*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 1,575억원(16%↑), (민관공동투자반도체인력양성) 120억원(19%↑)
  - \*\* 반도체아카데미 : ('23) 23억원 → ('24) 43억원(85.2%↑) / 배터리아카데미 : ('24 신규) 57억원
- (석·박사생) 연구몰입 환경 조성\*, (신진연구자) R&D 프로세스 참여 확대, (공공연구자) 기술창업 활성화\*\* 등 스타 연구자 성장기반 마련
  - \* 사용증빙 간소화, 행정부담 개선 / \*\* 휴·겸직, 주식취득, 장비·기술 이용 전면 허용

### 3 공급망과 경제안보 확립 : 국민과 기업의 보루

#### 1 '산업 공급망 3050('23.12월)' 본격 추진

◇ 공급망 안정품목 특정국 의존도 '22년 70% → '30년 50% 이하 달성

#### □ 공급망 핵심기술 조기 개발 및 생산시설 구축 연계

- 공급망 안정품목 R&D 4배 이상 확대('23년 176억원 → '24년 739억원), 이차전지 등 주요 업종 공급망 안정품목 자립화 기술개발도 착수\*  
\* 이차전지 소재, 전기전자 핵심부품, 희소금속 재자원화 등 29개 품목
- R&D와 생산시설 구축 신속 연계를 위해 공급망 완결형 협력모델\*에 신규 지원('24년 3개 과제(60억원) 지원)  
\* 기존 1개 품목 지원에서 밸류체인 상 연계된 복수의 품목을 동시 지원

#### □ 다변화, 비축 확대를 통해 첨단산업 공급망 안정화

- 10개 이상 품목에 대해 대체 수입처 발굴을 지원\*하고 수입보험 지원 등 다양한 대체수입 인센티브\*\* 도입  
\* 대체처 발굴 및 현장 실사 → 샘플 수입 및 성능검사 → 대체품 도입까지 전주기 지원  
\*\* 수입보험 지원대상 확대(공급망 안정품목 포함) 및 중소·중견기업 한도 우대(1.5배)
- 리튬(5.8→30일분), 영구자석용 희토류(6개월→1년6개월분) 등 첨단산업 필수 핵심광물 비축 대폭 확대 및 신규 專用 비축기지\* 구축 착수(설계 등)  
\* 위치 : 새만금산단 / 건설기간 : '24~'26년 / 사업비 : 2,417억원

#### □ 소부장 특화단지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생산거점으로 육성

- R&D(135억원), 테스트베드 구축(240억원), 인력양성(15억원) 등에 총 390억원(국비 기준)을 투입
- 지자체·기업 수요\*를 반영한 특화단지별 맞춤형 육성계획 수립('24.上)  
\* 예) 부산 8인치 전력반도체 인프라 조성, 대구 모빌리티 모터 자립화율 제고, 오송 배지 등 바이오소부장 핵심부품 국산화 등

## 2 에너지·자원 국내 수급 관리 철저

### ◇ 국민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석유·가스의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

#### □ 석유, 가스 등 필수 에너지·자원 보유 확대

- 석유 : 국제 공동비축사업\* 확대로 글로벌 리스크에 선제적 대응,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비 바이오 항공유·선박유 조기 상용화\*\* 추진

\* 現 공동비축 계약물량 1,968만B(아람코 530만B, ADNOC 400만B 등), 약 26일 지속가능(IEA 기준)

\*\* 실증사업, 품질기준 마련, 인센티브 확대, RFS(의무혼합 비율) 상향 등

- 가스 : '제16차 장기천연가스 수급 계획' 수립('24.下), 읍·면 단위 LPG 배관망 구축\*으로 19개 마을 지역의 연료비 절감 지원

\* '24년 신규사업(341억원), 기존 LPG 용기 사용 대비 약 43% 연료비 절감

#### □ 우리 기업의 자원개발 투자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및 지원 확대

- 금융·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자원부국과의 자원외교 강화 및 글로벌 다자협력체\*\*에 적극 참여

\* 융자 : '24년부터 융자 지원비율 30% → 50%, 감면율 상향

세제 : 해외자원개발 광업권 취득 투자 세액공제 시행('24.1~),

핵심광물 공급망 관련 기술의 신성장 원천 기술 지정('24.2~)

\*\*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국제에너지기구(IEA) 등

- 자원개발 고도화 R&D 사업('24년 예타 착수)으로 자원개발 생태계 조성 및 기술경쟁력 강화

\* 기술개발 : 핵심광물 맞춤형 확보기술, 화석연료 관련 저탄소·친환경화 기술 등

#### □ 자원안보특별법 시행('25년)에 대비한 자원안보 위기 대응역량 구축

- 석유·가스·광물 등 핵심자원에 대한 조기경보체계 구축, 자원안보 기본계획 수립 등 국가 자원안보체계 구축 추진

\* 25년 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마련 및 자원안보협의회 구성, 핵심자원 선정 등 추진

### 3 경제안보 최전선을 수호하는 통상전략 전개

#### ◇ 각국의 자국 우선주의 조치에 선제적·다층적 대응체계 가동

#### □ 주요국의 산업정책 대응, 수출 통상현안 관리 및 협력체계 공고화

**양자** : 국가별 맞춤형 협력을 통해 첨단산업 중심 공급망 안정화

- 美 : 장관급 정례채널(SCCD 등)을 통한 IRA 잔여 쟁점\* 해소 추진 및 반도체 등 첨단산업 협력\*\* 지속 추진

\* ①IRA 해외우려기관(FEOC), ②FTA 체결국 범위 확대 등 협의

③인니<sup>니켈</sup> 등 광물 확보(광산 탐사·개발 용자, 해외자원개발 투자세액공제 등)

\*\* 한·미 공급망 산업대화(SCCD, 장관급) : '22.5월 발족, '23.4월 1차회의 개최

- EU : 공급망·첨단산업 육성(반도체법, 배터리법 등), 기후·환경(CBAM 등) 등 포괄적 산업정책·경제법안에 체계적으로 대응

\* 한-EU 공급망산업정책대화(SCIPD, 차관급) : '23.6월 발족, 12월 1차 회의 개최

- 中 : 원자재·부품 등 한중 간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채널 활성화\*, 현지 진출기업 경영 지원 및 한중 FTA 업그레이드 모색

\* 한중 투자협력위(中상무부), 산업장관회의(中공신부), 지방정부(산둥·장쑤·광둥) 협력 등

- 日 : 반도체 등 첨단산업 공급망 협력\* 및 보호무역조치 공동대응, 디지털 통상·기후변화 등 新통상 아젠다 협력 확대\*\*

\* ▲기술협력, ▲인력교류, ▲제3국 공동진출, ▲핵심광물·에너지 수급 협력 등

\*\* ▲디지털전환, ▲수소, LNG, 에너지기술·효율, 무탄소에너지, ▲무역안보

**다자** : 다자 협력 활성화 및 국제적 공조를 통해 보호무역 주의에 대응

- '24.上 제1차 한·미·일 산업장관회의를 개최하여 3국간 협력 제도화 (연례 개최 합의 등), 첨단산업·경제안보 협력 합의(공동선언문)

\* 3국 산업장관 공동선언문 발표를 통한 한미일 첨단산업·경제안보 협력 강화 추진

- 미국, EU와 국제표준 공동개발 및 표준\*·기술규제\*\* 협력 강화

\* 국표원-미 NIST MOU 체결('24.1분기), 제 4차 한-미/한-독 표준협력대화 개최('24.12)

\*\* 인도, 중동 등 新시장 기술규제 협력, “무역기술장벽 글로벌 포럼” 개최('24.4분기)

- 한·일·중 정상회의, 경제통상 장관회의, 한-아세안 정상회의 등을 통해 동북아·아세안 공급망·교역관계 안정화 및 신산업 협력 강화

- 제13차 WTO 각료회의('24.2월) 성과 창출(분쟁해결제도 개혁 등), 2025 APEC 성공적 개최 준비 등 핵심중견국가로서 다자무역 복원



## □ 공급망, 첨단기술 관련 국제 경제·통상 네트워크 확대

- 광물·자원, 시장잠재력 등 전략적 가치가 큰 아프리카, 동남아, 동유럽 거점국 중심으로 유연한 형태의 EPA\* 10개 추진

\* 경제동반자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중앙아, 중남미 등과 공급망, 투자 협력을 위한 TIPF\* 40개 확산

\*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rade and Investment Promotion Framework)

- 싱가포르 등과 경제안보·글로벌 기술협력을 위한 新통상협정\* 추진

\* 기술-통상협정(Technology-Trade Framework Agreement)

## □ 불공정 무역으로부터 신속·효과적으로 산업피해 구제

- 우회덤핑방지제도 도입, 산업피해 구제조치 수준 강화\* 등 제도 개선 및 잠정조치(잠정 덤핑방지관세 등) 적극 시행

\* ①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3년 → 5년 정착, ②산업피해구제율 산정방식 개선 등

## 4 국가 핵심기술 보호 강화

### ◇ 첨단산업 중심으로 국내 핵심기술 해외유출 방지 강화

## □ 첨단산업의 수문장으로서 무역기술 안보 강화

- 「무역·기술 안보 전략」을 수립하고, 전략물자관리원 확충\* 및 수출통제 이행팀 신설 등 지원체계 강화

\* 대외무역법을 개정하여, '무역안보관리원'으로 명칭 변경 및 정책수립 지원 등 기능 강화

-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통해 핵심기술 보호관리 체계 정비

\* 징벌적 손해 한도 상향, 보유기관 등록제 신설, 해외인수합병 심사 강화 등

- 첨단산업(국가첨단전략기술) 전문인력 지정, '사람을 통한 기술유출 방지대책' 수립('24.2분기)

- 주요국과의 양자 수출통제 채널을 확대하고, 바세나르, 민감기술 다자협의체 등 다자간 수출통제체제에 주도적으로 참여

## □ 경제안보 및 국가 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통상 조직 강화 검토

- 신통상 이슈(공급망·디지털 등), 첨단산업, 수출통제, 기술보호 등 무역·경제안보 핵심 이슈에 대한 전방위적 대응 체계 확보



## 4 무탄소 에너지 대전환 : 깨끗하고 따뜻한 에너지

### 1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 글로벌 확산

#### ◇ 무탄소에너지에 대한 글로벌 스탠다드를 선도하고 외연을 확장

##### □ 국내 기업 여건을 반영한 우리측 CFE 이행기준(안) 마련

- 국내 제조기업들이 효과적으로 CFE를 이행할 수 있도록, 우리 실정에 맞는 에너지원, 조달수단, 정산방법 등 이행기준(안) 마련
- 업종별·기업규모별 우리 기업의 여건을 적극 고려하도록 업계·학계 의견수렴을 통해 선제적 과제 발굴 → 이행기준(안)에 반영

##### □ 우리측 이행기준(안) 바탕으로 주요 국가와 논의하여 국제표준 확립

- IEA 각료회의('24.2) 등 국제행사를 계기로 주요국가가 참여하는 글로벌 공동 작업반\*(working group)을 구성

\* 참여 국가별 5인 내외 전문가 추천을 받아 공동 작업반 구성·운영

- 우리가 마련한 이행기준(안) 바탕으로 글로벌 이행기준 확립 논의를 조속히 착수 → 연내에 합의안 등 가시적 성과 도출

##### □ CF연합이 글로벌 무탄소에너지 플랫폼으로 도약하는 원년(元年)

\* '23.9, 대통령 유엔총회 연설 계기, 전세계 누구나 참여가능한 오픈 플랫폼으로 결성('23.10)

- 現 20여개 국내 기업 중심의 CF연합의 외연을 확장하여, 지자체, 협·단체, 해외기업 등으로 참여 주체를 다변화
  - 해외기업의 경우 국내에 진출한 기업 중심, 국내 투자협약(MOU), 준공식 등 주요 행사 계기로 참여를 적극 독려
-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각종 회의·세미나\* 등을 활용하여, 전세계 각국에 CF연합 참여 유치 활동을 전방위 전개

\* 국내 : 기후산업국제박람회('24.9), 가칭글로벌 CFE 포럼(CF연합, '24.10)  
국외 : WEC총회('24.4, 네덜란드), COP29('24.11, 아제르바이잔)

## ② 무탄소 에너지원별 공급 역량 강화

### ◇ 무탄소 에너지원 원전·재생·수소의 공급 역량 확대 및 산업 생태계 확충

#### □ 원전일감 3.3조원 공급, 원전수주 조기달성을 통한 생태계 복원 완성

- 신한울 3·4호기 건설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보조기기 계약 즉시 선금을 수령\*\*토록 하여 원전기업 현장에서의 온기 확산

\* 원전일감 공급 (발주 기준) : ('22) 2.4조원 → ('23) 3.0조원 → **(24) 3.3조원**

\*\* (기존) 계약 2~3년 후 납품시 대금지급 → (개선) 계약직후 총계약금 30%이내 선금지급  
- 선금 보증수수료도 최대 75%까지 지원, 중소 기자재업체 부담 완화

- 원전 특별금융을 2배로 확대\*하여 원전기업 자금난을 해소하고, 조특법 세제혜택 대상 확대\*\*를 통해 원전 신기술 투자 촉진,

\* 원전 특별금융 : ('23) 0.5조원 → **(24) 1조원**

\*\* 원전 분야 핵심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에 추가·확대 반영

-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을 제정하여 원전 전주기 제도적 기반 완성
- 원전설비 5조원 수주 조기 달성 및 '27년 목표를 10조원으로 상향, 체코·폴란드 등 입찰에 집중하여 대형원전 수출 가시화

#### □ 시장중심, 중대규모, 계획입지 등 재생에너지 보급제도 개편

- 고비용·경쟁 제한적 RPS 제도는 발전사업자간 가격 경쟁을 통해 보급기반을 확산하는 방향(경매제도)으로 단계적 전환
- 중대형·산단 중심 태양광 보급 및 차세대 태양전지 개발, 계획 입지 및 인허가 일괄지원을 위해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 추진

#### □ 청정수소 시장 개설, 투자 본격화로 글로벌 수소 선도국 도약

- 세계 최초 청정수소 발전 입찰시장 개설 및 청정수소 인증제 시행('24.上), 수소 클러스터 조성\* 본격 추진

\* '24~'28년 클러스터 조성 : 포항(수소 연료전지, 총 1,918억원), 동해·삼척(수소 저장운송, 총 3,177억원)

- 수소 발전, 수전해 등의 글로벌 기준에 맞는 안전규제 확립(총 25건)
- 한·일 등 양·다자 수소협력 강화 및 수소가격 벤치마크 도입 연구

### 3 무탄소에너지를 위한 전력시장 개편 및 전력망 확충

#### ◇ 질서있고 조화로운 무탄소 에너지 확산기반 구축

##### □ 중장기 무탄소에너지 전력공급 계획 마련

-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24.上)을 통해 에너지공급 안정성, 탄소중립, 효율성, 수용가능성이 조화된 전원믹스 구현

##### □ 원별(원전, 재생e) 시장제도 신설로 무탄소전원 확충 뒷받침

- 원전 차액계약\* 도입으로 低원가 기저전원인 원전 활용도 강화  
\* 계약기간 중 발전량·고정가격 보장으로 안정적 전력공급 기반 마련
- 재생e 가격입찰제도\* 적용으로 재생e의 안정적 확산 기반 구축  
\* 제주지역부터 우선 도입 후 전국으로 확대

##### □ 유연성 자원에 대한 공정한 보상으로 강건한 전력시스템 구축

- 양수발전, ESS 등 수익구조를 개선\*하여 지속적 건설 기반 조성  
\* (예시) 보조서비스 특성 반영 용량요금·계약시장 등 제도 확대
- 플러스DR\* 단계적 확대(호남 등) 등 수요측면 유연성자원 활성화  
\* 전력공급 과잉시 사전약정된 참여자가 전력사용을 증대(현재 제주지역 운영 중)

##### □ 기간망 확충과 전력수요·공급 분산으로 전력시스템의 안정성 제고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으로 인허가 절차 간소화, 주민수용성 제고 등 전력망 건설기간 대폭 단축 추진
- 분산에너지특구 지정, 전력계통영향평가 도입 등 전력수요·공급 분산으로 전력망 건설 부담 완화

#### 4 에너지 효율 혁신 및 에너지 복지 강화

##### ◇ 효율 혁신을 통한 에너지 수요절감 및 따뜻한 에너지 복지 제공

##### □ 저탄소 중심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효율혁신 강화

- 국가 에너지 소비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현장의 선제적·자발적 효율투자 확산을 위한 재정·금융·세제 등 지원 강화
  - \* 30대 에너지 다소비 기업의 효율투자 이행 지원 확대 등
- 에너지 다소비 대형건물을 중심으로 고효율·저공해 설비 교체, 수요관리 인프라 보급 확대 등 제로에너지건축물 전환 가속화
- 고효율 제품 개발·시장보급 확대를 위한 효율관리제도 정비 및 친환경차 전환 추세에 대응한 전기차 효율등급제 본격 시행

##### □ 에너지복지 제도 및 전달체계 개편을 통한 접근성 강화

- 바우처, 요금할인 등 다양한 형태로 시행 중인 에너지복지 사업의 요건, 지원수준 등을 고려하여 단순화 방안 마련
  - \* (예시) 연탄쿠폰, 등유 바우처 등을 에너지 바우처로 일원화 등
- 우편원·검침원·복지협단체 등이 직접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도입\*, 위기가구 모니터링 및 에너지이용권 사용안내·전달 추진
  - \* 에너지공단 사업운영비(44.6억원) 내에서 우정사업본부 복지등기우편서비스, 복지 관련 협단체, 한전MCS 검침원 등을 활용하는 방안 검토

##### □ 수혜자 중심의 폭 넓고 촘촘한 지원을 통한 사각지대 최소화

-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 확대(34.7→36.7만원) 및 동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연장(1개월)을 추진\*하고, 지원대상 추가 발굴\*\* 검토
  - \* '23년: (하절기) 4.3만원, 7.1. ~ 9.30. 사용 / (동절기) 30.4만원, 10.11. ~ 4.30. 사용  
'24년: (하절기) 5.3만원, 7.1. ~ 9.30. 사용 / (동절기) 31.4만원, 10. 4. ~ 5.25. 사용
  - \*\* 기초생활수급가구 범위 내에서 다자녀 가구 등 기후 민감 계층 추가 발굴 검토
-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를 複數의 에너지원에 동시 사용할 수 있도록 적용 대상 에너지원 확대\* 추진(현행 1개→ 2개 이상)
  - \* (예시) 3종 에너지원 중 택1 → 전기+도시가스 or 전기+지역난방 등 복수 사용 가능
- 취약계층·소상공인 대상 고효율 기기 보급 등 효율개선 지원 확대
  - \* (취약계층) '23년 1,241 → '24년 1,392억원, (소상공인) '23년 400 → '24년 1,100억원

## 5 지역경제 및 투자 활성화 : 구석구석 온기 도는 지방시대

### 1 지방투자 촉진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 ◇ 지방이 원하는 산업, 투자, 일자리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

- 14개 지방정부의 65조원 규모\* 기업 투자 프로젝트 적기 이행을 위한 애로해소 지속

\* 14개 지방정부-지역 투자기업 간 MOU 체결 등 기업투자 유치(MOU 769건, 약 65조원)

- 비수도권 및 수도권 일부 지역(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에 '기회발전 특구'를 신규 지정('24.上)하여 기업의 대규모 지방투자 유도

\* (지정절차) 지방정부(시·도지사)가 투자 예정기업과 협의하여 입지 선정 및 특구계획 수립 → 산업부에 지정 신청 → 지방시대위 심의·의결 → 산업부 장관이 지정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한도(기업당 100→200억원), 비율(입지보조금(중견) 5%p 등) 상향 및 지원요건 완화\*로 기업 지방투자 부담 완화

\* 내연차 업체의 미래차 전환 등에 연면적 증가·신규고용 등의 요건 탄력적 적용 등

#### □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은 지원하는 미래전략산업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미래 모빌리티, SMR 등 지역별로 선정한 미래 신산업 혁신 인프라 구축 추진('24년 산업부 관련 25개 과제, 1,047억원)

- 첨단산업 관련 기업에 필요한 초기 현장인력을 맞춤형으로 양성하고 적기 공급할 수 있도록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 확대\*

\* ('23, 시범) 10억원/4개社/교육생 80명 → ('24, 본사업) 15억원/10개社/교육생 150명

- 지방시대위와 함께 지방정부의 '24년 초광역권발전 시행계획 수립을 지원하고('24.3), 시·도간 연계협력 산업 발굴·육성

## □ 민간수요 중심, 지방 주도로 경제자유구역·자유무역지역 개발 촉진

- 경자구역 신규·추가지정 수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수시지정을 활성화하여 지역투자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 경자구역 개발계획 변경권한 등 중앙 권한의 지방이양 확대
    - \* 개발계획 변경사항 중 개발면적·기간·비용 등 지방정부의 변경권한을 확대(경자법 개정)
- 자유무역지역을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하여 첨단 수출·투자유치 거점 및 제조·물류 융복합 중심지역으로 육성(자유무역지역 제도혁신 전략 마련, '24.上)

## 2 지역 산업단지 혁신 가속화

### ◇ 산단을 기업과 청년이 모이는 혁신공간으로 전환

## □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킬러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

- 입지 킬러규제(입주업종, 토지용도, 매매·임대 제한) 개선방안('23.8.24)의 차질없는 이행\*과 기업의 신산업 투자장애 발굴 및 신속 지원\*\*
  - \* 킬러규제 관련 「산업집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24.1.2) → 하위법령 정비 후 시행('24.7월)
  - \*\* (例) 포항 블루밸리 산단 內 이차전지 업종 입주허용을 위한 관리기본계획 변경 추진, 폐배터리,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등 자원순환 신성장 산업의 산단 입주기준 마련
- 지방 일반산단 입주기업의 경영·투자활동 애로사항 발굴·개선
  - \* 산업부, 지자체, 산업단지공단, 지방 산단 관리기관 등으로 지방산단협의체 구성·운영

## □ 문화·편의·주거시설 확대로 '청년이 일하고 싶은 산단'으로 탈바꿈

- 정부자금 마중물과 민간투자 제도정비로 주거, 편의시설 조성에 민간투자 확대
  - \* 산단환경개선펀드, ('23) 958 → ('24) 1,868억원 / 복합용지, 토지용도 전환 규제 완화
- 청년복합문화센터, 아름다운 거리, 노후공장 리뉴얼 등 산단혁신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환경개선 효과 극대화
  - \* '24년 청년복합문화센터 30개소, 아름다운 거리 28개소, 노후공장 리뉴얼 150개사

## □ 디지털·저탄소 전환 가속화로 산단 입주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제조 전주기(기획·설계~판매 등) 디지털화 지원 인프라 확산
  - \*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 반월, 대구 등 3개, (스마트물류플랫폼) 구미, 광주 등 6개
- 산단 내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인근 재생에너지 단지(태양광, 풍력)와 연계한 PPA(전력구매계약) 확대 등을 통해 저탄소화 촉진
  - \* (신재생 인프라 및 에너지효율화) '23년 590억원 → '24년 1,060억원
- 산단 內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방안\* 마련
  - \* 생애주기 배출량 측정 플랫폼 구축, 감축수단 지원(인근 신재생 인프라 연계 PPA 등)

## 6 국민 체감형 업무혁신 : 국민의 불편을 바로 해소

### 1 관행적 불공정·불합리 해소

#### ◇ 관행적 불공정·불합리 요소를 발굴·제거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편의 향상

## □ 기업 투자와 신산업 성장을 저해하는 킬러규제 우선 혁파

- ① 수소 신기술의 신속한 상용화를 위해 수전해·충전소·발전 등 핵심 분야 선제적 안전기준 개발 및 규제애로 해소('24.1Q 발표)
- ②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①소비자 편의 확대, ②안전 등 미비점 보완, ③시장진입 걸림돌 제거 추진('24.1Q 발표)
- ③ AI 자율 제조 도입을 통한 제조업 생산성 제고와 디지털 전환을 위해 규제혁신 등 선제적 제도·인프라 정비(연내)

## □ 대형마트 영업규제 합리화 통해 국민 쇼핑 편의 증진

- 온라인 중심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 대형마트 영업규제 시간에 온라인 배송 허용을 위한 유통법 개정 추진 → 새벽배송 가능지역 확대
- 의무휴업 공휴일 지정 평일 전환 관련 제도개선 등 의무휴업 평일 전환 확산을 통해 소비자 편의 확대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



## □ 안전인증기관 확대로 인증 서비스의 질 개선

- 인증 서비스 경쟁 촉진과 기업 만족도 제고를 위해 역량있는 민간 영리법인이 안전인증기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 제거
  - \* 안전인증기관 지정요건에서 비영리 삭제, 특수·고가 시험설비는 외부 설비 보유 기관과 계약 체결 허용 등 시험설비 투자부담 완화
- 「KC인증 불편신고센터(‘23.12월 개소)」를 통해 기업의 인증 애로를 발굴·해소하고 인증기관 부당행위 등 불공정 인증 근절

## □ 재생사업자의 위법·부당행위 엄정 조치, 재생에너지 특혜 제도 개편

- 한국형 FIT 농업인 부자격자는 조사완료 후 계약해지 추진(1분기), 전력유관기관의 임직원 및 가족 태양광 사업금지 규정 마련
- 재생e의 계통안정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시장·허가제도 등 개편
  - \* 재생e 입찰제도 도입, 계통포화지역 발전사업허가 제한 등
  - 소규모 위주 보급과 편법분할을 유발하는 소규모 우대조치 연내 개편
    - \* (기초치) 한국형 FIT 일몰(‘23.7), 소규모 계통우대 종료(‘24.1) (향후과제) REC 가중치 개편 등
  - 재생e 보급·용자 지원제도\*는 시장성숙을 고려하여 자기부담 상향 및 정부 보조비율 완화
    - \* 국무조정실 조사(‘23.7) 결과, 신재생 용자사업 관련 수천억원 규모의 위법·부적정 집행 확인
  - 적정 발전원가를 초과하는 수익으로 국민부담으로 귀결되는 현물 REC 가격 안정화 추진

## □ 현장방문에서 원격점검으로 전기안전관리방식 전환하여 국민편익 향상

- 기존 현장방문·대면·주기적 안전점검 방식을 신기술(ICT·IoT 결합) 기반 원격·비대면·상시 안전관리방식\*으로 전환 추진
  - \* 원격점검장치(누전, 과부하 등 센싱기술)의 안전데이터를 관제시스템으로 전송, 분석·가공·개방하여 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정보 제공(빅데이터, 플랫폼)
  - \*\* (1단계) 가로등, 신호등 등 도로조명시설 → (2단계) 취약계층 노후시설 → (3단계) 일반주택
- ①국민 편의(즉시 송전, 예산절감)과 ②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현장 방문 중심의 사용전점검 업무를 온라인 방식\*으로 개편
  - \* (절차) 시공능력 평가를 거쳐 시공 우수업체를 선정하고, 기술서류, 점검희망일 등을 온라인으로 접수, 전문직원의 화상검토 후 사용전점검 결과 판정 → 즉시 송전(전기공급)



## 2 부처간 협업과제 확대

### ◇ 부처간 칸막이를 넘어 수출, 산업성장에 협력

#### □ 수출 확대를 위한 범정부 총력 지원

- V 주제 '수출전략회의' 등을 통해 업종별 경쟁력 강화, 기업애로 해소, 품목별·국가별 맞춤형 지원 등 범부처 지원방안 지속 수립
- 다수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다부처 협업과제\*** 발굴 및 지원 추진  
\* 예) 화장품·의료기기(복지부, 산업부, 식약처), 농수산식품(농식품부, 해수부, 산업부) 등
- 부처 합동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 애로 원스톱 해결  
\* 예) 산업부-복지부 합동 「바이오산업 수출지원회의」(22.12월)
- 「범정부 수출확대 전략」(23.2월) 과제를 충실히 이행·점검

#### □ 세계 4위권 방산 수출을 목표로 지원체계 확충 등 기관간 협업 확대

- 「방위산업 5대 핵심 소부장\* 기술개발 로드맵」을 수립하고(24.上) 소부장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2조원 이상 민·관 투자 추진(~27년)  
\* (우주) 발사체 부품, 고해상도 센서, (AI) 전장 인식 알고리즘, 군수 데이터 분석 SW, (유무인) 고에너지 배터리 등, (반도체) 고신뢰 반도체 패키지 등, (로봇) 스마트 구동기 등
- 민간산업과 방산을 연계한 대형 프로젝트(항공 엔진\*) 투자 및 절충 교역 등을 활용한 민·군 겸용 기술 상업화 촉진 지원  
\* 「방위산업 발전협의회」(산업장관, 국방장관 공동 주재) 의결을 통해 예타 추진(24.上)
- GCC FTA 타결 등과 연계하여 수요국 맞춤형 수출 전략\* 마련(24.上), 「방산 물자 교역 지원센터」 확대 개편\*\* (24.上) 등 수출 지원체계 확충  
\* 국가별 무기체계 수준 분석 → 방산-산업 협력 연계 「Two-Track 수출 전략」 마련  
\*\* 「방산 수출 혁신단(가칭)」: G2G 방산 수출 기능 강화(▲산업 협력+수출금융, ▲방산+민수기술 등)

#### □ 산업계 인력을 적시에 충분히 공급하기 위한 범부처 협력 확대

- 조선, 뿌리 등 외국인력(E-9)에 대한 수요 및 애로사항 지속 모니터링, 첨단분야 해외인재 유치를 위한 비자, 정착 지원방안 등 마련
- 첨단·소부장 특화단지, 기회발전특구 등 지역 클러스터의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부-교육부-지자체간 인재양성 협업 추진

### 3 현장에서 직접 문제 해결

#### ◇ 산업 현장에서 신속하게 기업 애로를 해소하는 「현장 산업부」

#### □ 3대 부문(설비, R&D, 외투) 투자 확대를 위한 현장 해결형 시스템 구축

- 산업부 장관 주재 현장 소통 채널인 산업투자전략회의\*를 신설하여 분기별 기업 투자 계획 점검 및 현장 애로 해결방안 모색

\* 정부, 기업(10대 핵심 업종별 대표 등), 경제단체(대한상의, 한국경제인협회, 무역협회 등), 연구기관(산업연구원 등)

- 산업부 기동대(기업 투자동향 대응반) + 프로젝트별 담당관을 지정하여 상시 업종별 투자애로 점검 및 밀착 지원

\* 산업부 과장급 업종별 담당관으로 지정 → 애로 해소시까지 지속 모니터링·지원, 주기적으로 산업투자전략회의에 진행상황 및 결과 보고

- 설비(대한상의), R&D(산업기술평가원), 외투(Kotra) 등 민관협업 시스템을 통해 기업 현장애로 수시 접수창구 마련 및 신속 회신 시스템\* 구축

\* 매월 현장 소통 계획·실적 점검하고 접수된 투자애로는 15일내 담당관이 직접 회신

#### □ 민생현장 목소리 청취 및 민관이 함께하는 수출대책 마련

- 정부-수출 유관기관이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애로를 접수하고 해결책을 논의하는 「수출현장 지원단(장관 주재)」 월 단위 운영

\* (예시) (1월) 자동차, 반도체, (2월) 이차전지, 조선 등

- 현장 중심의 신속한 애로 해소 및 체감형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장관 주재)」 활성화

#### □ 자국우선주의에 대응, 국내 산업피해 최소화를 위한 밀착 지원

- 新무역장벽 확산에 대비, '통상법무 카라반\*' 발족 및 '민관합동 무역장벽 협의회' 추진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밀착지원군 역할 강화

\* 관련업계 순차 설명회 등을 통해 해외규제 준수 등 각종 통상법무상 애로해소 지원

#### ⇒ 부내 「개혁TF\*」를 신설하여 업무 쏠분야에 걸친 과감한 혁신 추진

\* 장관 주재 국·과장, 실무자 등 다양한 직급 참여 구성

#### ◇ 「개혁TF」 중심으로 경제활동의 자유를 가로막는 불공정 관행·규제를 타파, 부처 협업, 현장중심 소통으로 국민체감 성과 창출